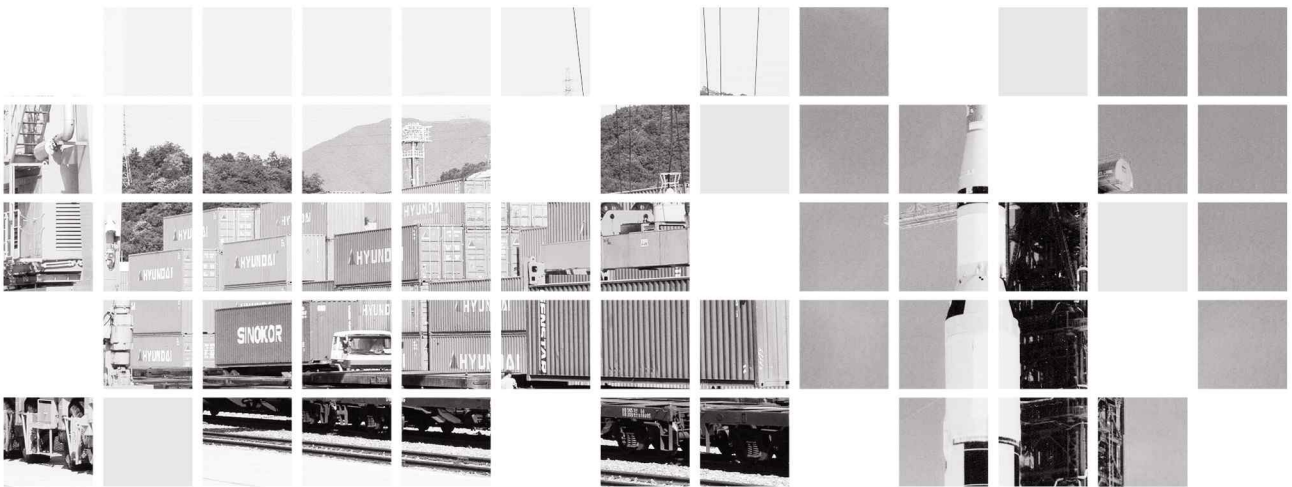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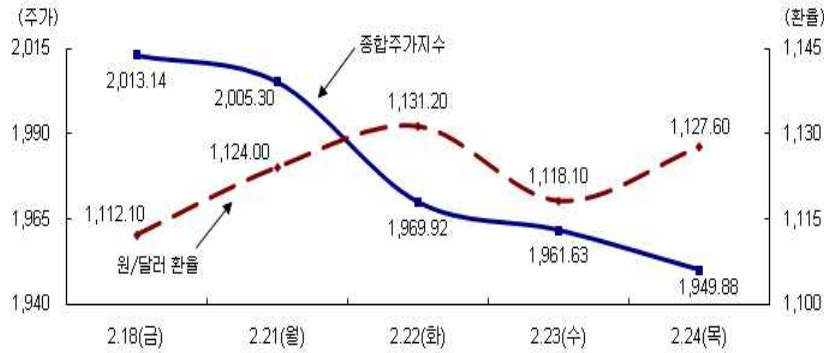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한국형 복지모델의 방향
- 복지·세금·성장 연계 모델의 정립]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18~2.24)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한국형 복지모델의 방향: 복지·세금·성장 연계 모델의 정립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김 동 열 수석 연구 위원 (2072-6213, dy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한국형 복지모델의 방향 : 복지·세금·성장 연계 모델의 정립

■ 최근의 복지 논쟁과 복지지출 현황

2011년 복지 예산은 86.3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큰 규모와 비중을 점하고 있다. 반면, 최근 국세수입 증가율은 1990년대의 절반으로 하락하는 등 복지지출의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복지수준과 재원조달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스웨덴(사민주의), 독일(조합주의), 영국(자유주의), 일본(가족주의) 등 복지국가 유형을 대표하는 네 나라의 1980년(국민소득 1만 달러 내외), 1990년(2만 달러 내외) 시기의 복지지출 수준과 우리나라의 2007년 수준을 4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본 결과, 복지지출 수준은 低부담·低복지 모델을 추구한 일본의 1990년 수준에 못 미치며 다른 OECD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편이지만, 지난 20여년간 복지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 국가채무규모 등은 빠르게 증가했다.

①**복지지출 비중 비교: (GDP 대비 비중)** 2007년 현재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GDP 비중 7.5%는 OECD 평균(19.3%)에 크게 못 미치며, 1990년 OECD 평균의 2/5수준, 1980년 OECD평균의 1/2수준에 그친다. 향후 연금수령자의 증가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GDP의 11.5%로 4%p 상향 조정하면 1990년의 일본(11.3%)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정부지출 대비 비중)** 2007년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 지출의 정부지출 대비 비중은 25.2%로서 1990년 영국의 45.2%, 1991년 독일의 51.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나, 경제사업 지출은 22.1%로서 선진국의 1990년 수준(10% 내외)보다 2배 가량 높은 상태다.

②**복지지출 구조 비교:** 복지프로그램별 지출의 GDP 비중을 선진국의 1990년 당시와 비교해 본 결과, 보건과 기타(공적 부조 포함) 분야의 지출은 비교적 높지만, 노령, 장애, 가족, 직업훈련, 주거 분야 지출은 낮은 편이다.

연금수령자가 아직은 많지 않아 '노령(old age)'분야 지출 비중이 1.6%로서 1990년 OECD평균(5.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산업재해와 관련된 근로무능력 등 '장애'분야 지출은 0.6%로서 OECD평균(2.1%)의 1/4수준에 불과하다. 아동보육과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가족'분야 지출은 2007년 0.5%로서 5년 전보다 5배 급상승했으나, 1990년 OECD 평균(1.6%)의 1/3수준에 불과하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관련 지출은 GDP의 0.1%로서 1990년 일본(0.3%)의 1/3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주택바우처, 임

대로 보조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주거'관련 지출은 0%에 그치고 있다.

③**복지지출 여건 비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과 국가채무 등 복지지출 여건은 양호하지만, 최근 그 증가율이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향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조세부담과 사회보험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007년 현재 27%로서 1990년 일본 수준에 불과하며, 1990년 영국(36%), 독일(35%), 스웨덴(52%)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편이다. 2007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30% 수준으로 1990년 일본(68%), 1994년 스웨덴(72%)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스웨덴은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채무비율도 2007년 40%로 크게 낮췄으나, 일본은 국가채무가 200%에 근접하는 등 재정악화가 심각하다. 우리도 최근 국가채무가 400조 원을 넘어섰고 그 증가율이 매우 빠르다.

④**복지지출 경로(path) 비교:**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은 6%였으나 복지지출 증가율은 그 보다 훨씬 높은 12%를 기록하여, 복지지출의 GDP비중은 2배 이상, 국민부담률은 7%p 급증했으며, 현재 복지수준은 1990년 일본 수준에 못 미친다. 한편, 지난 30여년간 선진 4개국은 2%대의 경제성장률 하에서 3%대의 낮은 복지지출 증가를 보였다. 영국, 독일은 지난 1980년대에 복지지출의 GDP 비중 20%, 국민부담률 35%에 도달했으며, 일본은 조세부담 없는 복지 확대를 재정 악화를 자초했다. 최근 스웨덴은 복지 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을 낮추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선진 4개국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기(1990년)에 못 미치고 조세부담도 낮은 편이지만, 지난 20여년간 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했으며, 성장률과 세금 수입은 지난 '90년대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따라서, 향후 복지지출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복지-세금-성장 3者を 연계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이 필요하다. 즉, 우리의 2007년도 복지지출비중, 국민부담률 조합(7.5%, 26.5%)을 독일, 영국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기(1990년)의 조합(20%, 35%)으로 수렴시키고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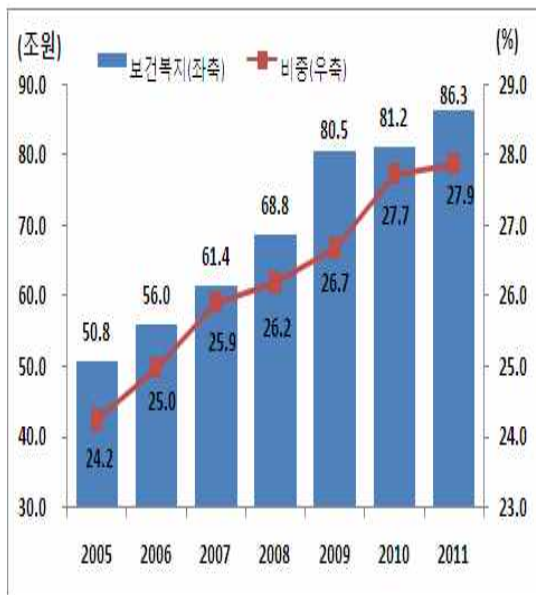
이를 위해 첫째, 복지지출 구조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추진하고, 보육, 직업훈련 등 성장친화적 복지지출의 비중은 늘려야 한다. 둘째, 정부예산 구조의 재조정을 통해, 복지지출의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득과약률을 근로소득자 수준으로 제고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복지지출의 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1. 최근의 복지 논쟁과 복지지출 현황

○(복지지출 증가) 2011년 보건복지 예산은 86.3조 원으로 전체 정부예산 대비 28%로 다른 예산에 비해 가장 큰 규모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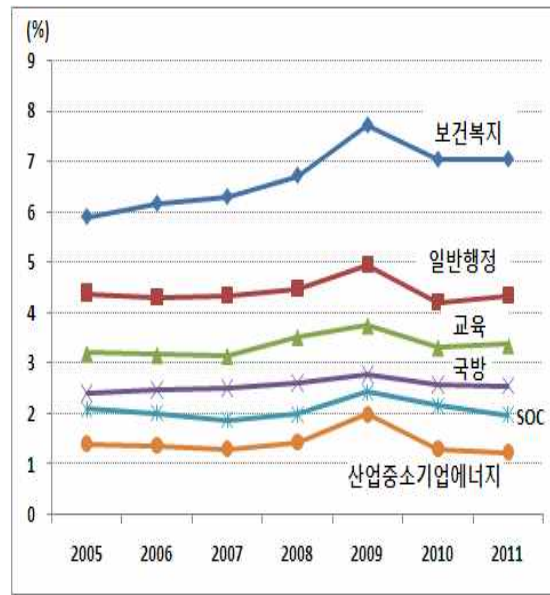
- 아래 표와 같이 2005년 기준 복지지출 규모는 50.8조원, 비중은 24.2%였으나, 2011년 각각 86.3조원, 27.9%로 크게 증가하여 30%에 근접하고 있음

< 복지지출의 총지출 비중 추이 >



자료: 기획재정부 (2010)
주: 추경 포함 총지출 중 보건복지 비중

< 복지지출의 GDP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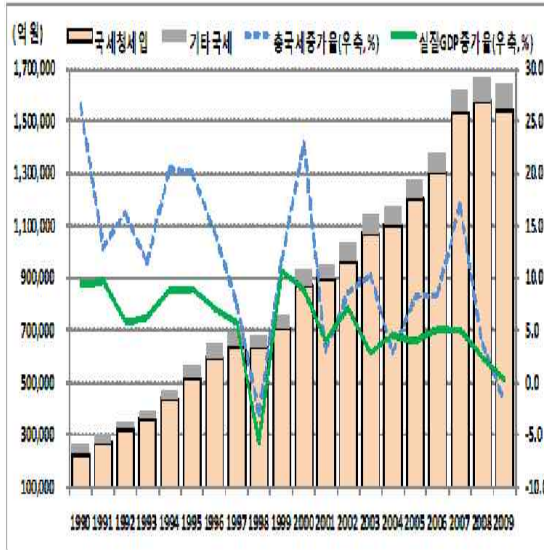


자료: 예산정책처 (2010)
주: 추경 포함 최종예산 기준

○(세수 여력 감소) 1990년 이후 세수 증가율이 GDP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세수 증가율과 GDP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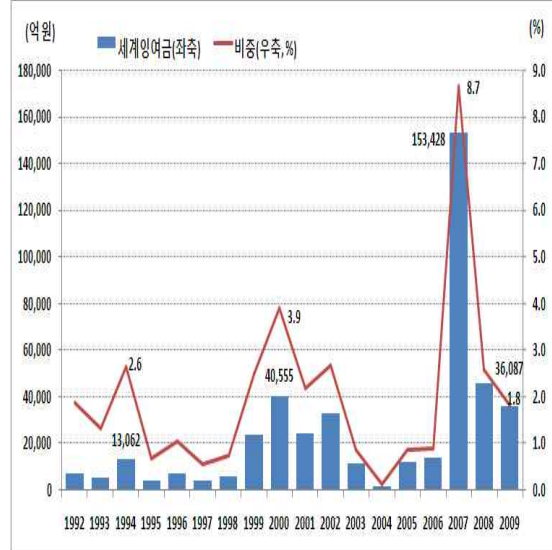
- 1990년 이후 10년 평균 국세 증가율은 12.2%에 달했으나, 2000년 이후 10년 평균 국세 증가율은 6.6%로 크게 떨어져 세수여력이 크게 감소함
- 경기가 후퇴했던 2001년, 2004년, 2009년을 제외하면 세수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 그러나,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이 과거처럼 대폭 발생하기는 어려우며, 2010년 이후에는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국세 증가 추이와 GDP 증가율>



자료: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재작성

<세계잉여금 규모 및 비중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 토대로 재작성

주: 총 세수 중 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복지논쟁 지속) 최근 복지지출의 급증과 세수 여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복지를 둘러싼 논란¹⁾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의 수준과 복지지출의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되어 있음

- 복지논쟁이 건전한 방향으로 전개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후에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대책과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함

< 최근 복지를 둘러싼 쟁점²⁾과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쟁점
복지수준 논란	•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	• 모든 계층 포함 보편적 서비스
	• 우리 경제수준에 적절	• 서민 중심 선택적 서비스
복지재원 논란	• 예산 절감과 구조조정	• 세원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
	• 천문학적 예산, 국가재정에 큰 부담	• 세금 부담 급증

자료: 언론 기사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1) 무상 급식/보육/의료 등 무상복지를 둘러싸고 선택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나, 소요 예산이 매년 20조원이나 50조원이나,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논란과 공방이 여야 정치권에서 지속되고 있음

2) 높은 복지지출 비중과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절대빈곤율’)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가 파악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비수급 빈곤층도 굉장히 많다는 복지지출의 효과 및 사각지대 관련 쟁점은 다루지 않았음

2. 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 선진국의 1980-90년 수준과 비교

- (비교 방법) 복지국가 유형을 대표하는 스웨덴, 독일, 영국, 일본 등 네 나라의 1980년(국민소득 1만 달러)과 1990년(2만 달러)³⁾의 복지지출 수준과 우리나라의 2007년 수준을 4가지 관점(지출비중, 지출구조, 재정여력, 과거 경로)에서 비교
- 비교국가는 사민주의, 조합주의(보수주의), 자유주의, 가족주의를 각각 대표하는 스웨덴, 독일, 영국, 일본의 네 나라로 선정했으며, 이와 같은 유형 구분은 Esping-Anderson(1990)과 Huber and Stephens(2001)을 참고
- 비교의 지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복지프로그램별 지출의 GDP 대비 비중, 국민부담률, 국가채무 비중, 복지지출 증가율, GDP 증가율 등
- OECD의 복지지출 관련 3가지 지표 가운데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을 기준으로 비교했으며, 이 지표가 순수하게 정부에 의한 지출을 나타내기 때문임
 - 2007년 현재 공공사회복지지출은 73.4조 원(GDP 대비 7.5%)
 - 법정 민간급여를 포함한 사회복지지출(1)은 79.1조 원(GDP 대비 8.1%)이며, 자발적 민간급여(2)까지 포함하는 총 사회복지지출은 99조 원(GDP 대비 10.1%)에 달함

< 복지지출의 3가지 지표와 범위 >

총사회복지지출(Total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자발적 민간급여 (2) (Voluntary Private EX.)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민간사회복지지출(Private Social Expenditure)	
일반정부 지출	사회보험 급여	법정 민간급여 (Mandatory Private EX.)	자발적 민간급여 (Voluntary Private EX.)
9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으로 분류 (노령 유족 장애 건강 가족 실업 적극적노동시장 주거 기타)			

자료: OECD SOCX Database

주: OECD 기준에 따른 9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4' 참조

3) OECD의 PPP기준 1인당 경상GDP가 2만 달러에 도달한 시기가 일본 1991년, 독일 1992년, 스웨덴 1994년, 영국 1996년이며, 실질GDP로는 일본 1988년, 독일 1988년, 스웨덴 1984년, 영국 1988년인 바, 2만 달러의 도달 시기를 비교대상 4개 국가는 1990년으로 단일화. 마찬가지로 1만 달러 도달 시기는 1980년으로 단일화.

① 복지지출 비중 비교

- (GDP 대비 비중) 현재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을 선진국의 국민소득 1만 달러, 2만 달러 시기와 비교하거나, 연금성숙도를 감안하여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양적 비교) 2007년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GDP비중은 7.5%로 OECD 평균(19.3%)의 절반에도 크게 미달. 스웨덴의 복지지출 비중 27.3%는 물론 우리와 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18.7%에도 크게 못 미침
 -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로, 끝에서 2번째로 낮은 수준(별첨3 참고)
 - (1990년 기준)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근사했던 1990년과 비교하더라도, 2007년 한국의 7.5%는 1990년 OECD 평균(17.6%)의 1/2수준에도 미달하며, 1990년 스웨덴(30.2%)은 물론 일본(11.3%)에도 크게 미달
 - (1980년 기준)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근사했던 1980년과 비교하더라도, 2007년 한국의 7.5%는 1980년 OECD 평균(15.6%)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며, 1980년 스웨덴(27.2%)은 물론 일본(10.4%)에도 못 미침
 - (질적 비교) 경제사회시스템의 국가별 발전단계를 감안하여 비교하는 국제지출비교(IEC)지수⁴⁾ 및 패널분석⁵⁾에 의한 연구 결과를 봐도 선진국과의 격차는 줄어들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
 - 향후 연금수령자의 증가와 연금성숙도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GDP의 11.5%로 4%p 상향 조정⁶⁾하면 '90년 일본의 11.3%보다는 높아지지만, 여전히 '90년 OECD 평균(17.6%)의 2/3수준에 불과

< 사회복지지출의 GDP 비중 비교 >

(GDP 대비 %)

	스웨덴	독 일	영 국	일 본	한 국	OECD 평균
2007년	27.3	25.2	20.5	18.7	7.5 (11.5)	19.3 (연금성숙도 감안)
1990년	30.2	21.7	16.8	11.3	2.8	17.6
1980년	27.2	22.1	16.5	10.4	-	15.6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0)

4) 국제지출비교(IEC)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경제사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한 전승훈(2006)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단순비교時 OECD평균의 15%, IEC지수비교時 OECD평균의 35%로 나타남
 5)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별 경제사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한 비교를 시도했던 박승준(200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단순비교時 OECD평균의 15%, 패널분석時 OECD평균의 39%로 나타남
 6) 우리나라의 연금성숙기를 2030년으로 가정했을 때 공적연금지출의 GDP 비중은 5.2%로 전망되며, 2006년의 공적연금지출은 GDP 대비 1.2%이므로, 2006년 현재와 연금성숙기와의 차이는 4%p의 차이가 있음. 윤석명 외(2006), 유근춘 외(2007) 등 기존 연구에서도 연금성숙도를 감안할 때 4%p의 차이를 적용하고 있음.

- (정부지출 대비 비중)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정부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교육/국방 분야의 지출은 선진국의 과거 2만 달러 당시의 지출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우리 경제분야 지출의 정부지출 대비 비중은 22.1%로서 다른 선진국의 1990년 수준(10% 내외)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며, 보건과 사회보장을 합한 복지분야 지출은 25.2%로서 1990년 다른 선진국의 40~50%보다 낮은 편
 - 영국의 경제사업 비중은 1990년 9.9%에 불과했으며, 우리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독일은 1991년 11.5%였고, 일본은 1990년 15.7%였음
 - 사회보장 분야의 지출은 2007년 정부지출의 12.2%를 차지하고 있어, 1990년 영국의 33.1%, 1991년 독일의 39.4%, 1995년 스웨덴의 40.9%, 1990년 일본의 23.9%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임
 - 우리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방 지출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분야별 자원배분의 국제 비교 >

(단위: 정부지출 대비 %)

		일반 행정	국방	공공 질서	경제 사업	환경	주택 지역 개발	오락 문화 종교	교육	보건	사회 보장
한 국(2007)		14.2	8.8	4.6	22.1	3.1	3.6	2.5	15.9	13.0	12.2
일본 (가족주의)	(2007)	12.9	2.5	3.9	10.4	3.4	1.7	0.3	10.8	19.9	34.1
	(1990)	19.0	2.9	3.9	15.7	4.5	2.7	0.6	12.6	14.2	23.9
영국 (자유주의)	(2007)	10.1	5.4	5.7	6.5	2.3	2.7	2.3	13.9	16.2	34.9
	(1990)	12.0	9.7	5.0	9.9	1.2	3.5	2.4	11.1	12.1	33.1
독일 (조합주의)	(2007)	13.6	2.4	3.6	7.0	1.0	1.9	1.4	9.3	14.1	45.8
	(1991)	14.4	4.0	3.2	11.5	2.1	2.1	1.9	8.9	12.5	39.4
스웨덴 (사민주의)	(2007)	14.8	3.0	2.6	7.9	0.7	1.4	2.1	13.1	13.0	41.4
	(1995)	16.5	3.7	2.2	8.9	0.3	4.3	2.8	10.8	9.6	40.9

자료: OECD

- 주: 1. 일반정부 총지출 가운데 각 분야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OECD 분류기준에 따름
 2. 가족·자유·조합·사민주의 구분은 Esping-Anderson(1990)과 Huber & Stephens(2001) 참고
 3. OECD 통계에서 독일, 스웨덴은 1990년 수치가 없어서, 1990년에 가장 근접한 수치를 인용

② 복지지출 구조 비교

○(복지지출 구조) 복지프로그램별 지출의 GDP비중을 선진국의 1990년 당시와 비교해 본 결과 보건 및 기타 분야 지출은 높은 편이며, 연금, 장애(산재 및 근로무능력 포함), 보육, 직업훈련, 주거 관련 지출은 낮은 편

- (노령) 연금의 수급 대상자가 아직 많지 않아, 노령(old age) 분야의 2007년 지출 비중이 GDP 대비 1.6%에 불과하여 OECD평균(6.4%)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1990년 OECD 평균(5.9%)에도 못 미치고 있음
 - 만약, 2030년의 연금성숙기를 가정하고 노령(old age) 관련 지출 비중을 4%p 올려 5.6%로 조정한다면, 1990년 OECD 평균(5.9%)에 근접함
- (장애) 장애인 복지 및 산업재해와 관련된 근로무능력 분야 지출은 2002년 0.4% 수준에서 2007년 0.6%로 올랐으나, OECD평균(2.1%)의 1/4수준에 불과
- (보건)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지출은 GDP의 3.5%로서 OECD평균(5.8%)보다 낮지만, 전체지출의 46.5%를 차지하는 등 다른 분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최근의 노인의료비 급증과 건보재정 적자에 유의해야 함

< 복지프로그램별 지출 비중 비교 >

(단위: GDP 대비 %)

	노령	유족	장애	보건	가족	실업	적극적 노동시장	주 거	기타	합계
한 국(2007)	1.6 (21.4)	0.3 (3.4)	0.6 (7.3)	3.5 (46.5)	0.5 (6.1)	0.3 (3.3)	0.1 (1.7)	- (0.0)	0.8 (10.3)	7.5 (100%)
OECD(2007)	6.4 (33.5)	1.0 (5.0)	2.1 (11.1)	5.8 (30.2)	2.0 (10.1)	- -	0.5 (2.4)	- -	0.7 (3.6)	19.3 (100%)
일본('90)(가족주의)	4.1	0.9	0.6	4.5	0.4	0.3	0.3	-	0.1	11.3
영국('90)(자유주의)	4.8	0.3	2.2	4.9	1.9	0.7	0.6	1.3	0.2	16.8
독일('90)(조합주의)	9.4	0.5	1.5	6.3	1.7	0.8	0.9	0.1	0.5	21.7
스웨덴('90)(사민주의)	8.6	0.7	5.5	7.4	4.4	0.9	1.6	0.6	0.5	30.2
OECD(1990)	5.9	0.8	2.3	4.7	1.6	-	-	-	0.4	17.6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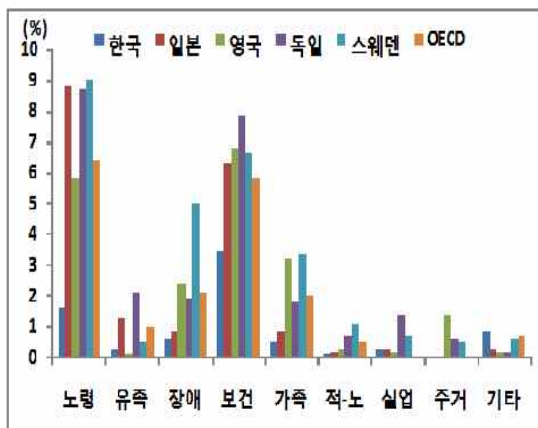
주: 1. 가족·자유·조합·사민주의 구분은 Esping-Anderson(1990)과 Huber & Stephens(2001) 참고

2. 정부 공공(public)부문의 지출에 한정했으며, 법정 민간지출은 제외함

3. 괄호 () 안은 전체 사회복지 지출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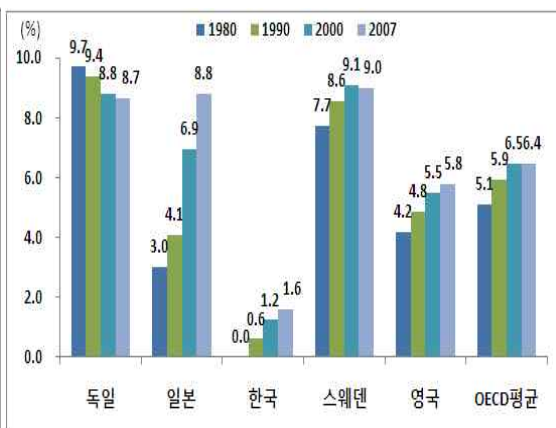
- (가족) 아동보육, 육아휴직, 부성휴가 등과 관련된 가족분야 지출은 2002년 GDP의 0.1%에서 2007년 GDP의 0.5%로 5년 만에 5배 급상승했으나, 2007년 OECD평균(2.0%)의 1/4, 1990년 OECD평균(1.6%)의 1/3에 불과한 수준임
- (실업) 실업급여 관련 지출은 1997년 GDP의 0%에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GDP의 0.2%로 급증한 바 있으며, 2007년 현재 0.3%로서 1990년 일본(0.3%)과 같은 수준이지만 독일, 영국, 스웨덴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침
- (적극적 노동시장) 직업능력개발, 출산휴가, 양성평등 관련 지출은 GDP의 0.1%로서 OECD평균(0.5%)의 1/5에 불과하며, 1990년 일본(0.3%)의 1/3 수준
 - 독일의 직장내 직업훈련, 실업자 채용 보조금, 직업알선제도 등에서 배워야
- (주거)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자금 용자에 그치고, 주거급여제도는 부재하여 OECD기준 주거 지출로 잡히지 않고 있으며, 현재 GDP의 0%로 기록됨
 - 영국은 주거복지에 가장 많은 지출(2007년 1.4%, 1990년 1.3%)을 해 왔으며, 스웨덴(2007년 0.5%, 1990년 0.6%)도 높은 편에 속함
- (기타)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 지출은 GDP의 0.8%로서 OECD평균(0.7%)보다 높는데,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한국 특유의 공적 부조가 들어있기 때문

<프로그램별·국가별 지출 비중 비교>



자료: OECD
주: 2007년 GDP 비중(%). 적-노 = 적극적 노동시장

<노령분야 지출 국가별·시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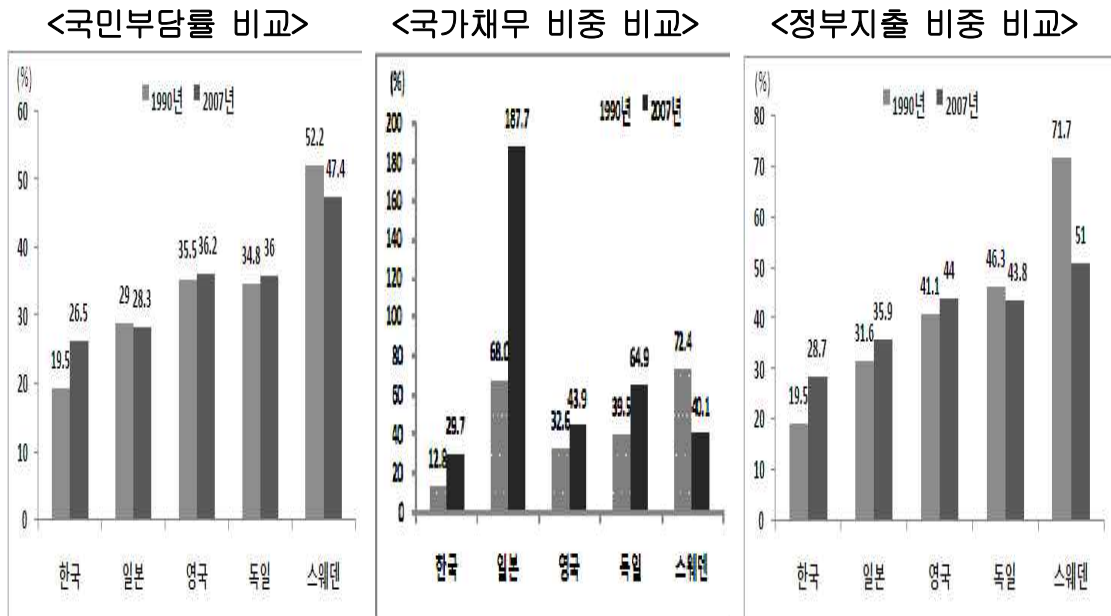
자료: OECD
주: GDP대비 비중(%). 한국은 1980년 데이터 없음

7) 2000년 시행 이래 기초생활보장 관련 저소득층은 2007년말 현재 약153만 명이고, 관련 예산은 6.6조원 규모이며, 2000년 '기타' 지출 비중은 GDP의 0.3%에서 2007년 0.8%로 급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수혜를 못 받는 빈곤층(사각지대)이 400만 명가량으로 지적되고 있음.

③ 복지지출 여건 비교

○(조세부담, 국가채무 비교)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부담률, 국가채무비율 등을 비교해보면, 1990년대 초반 선진국 국민부담률⁸⁾은 35% 내외, 국가채무비율은 30~70%로서 우리보다 훨씬 높았음

- 세금과 사회보험의 부담금을 합친 국민부담률의 경우, 2007년 우리나라의 26.5%에 비해, 1990년 영국은 35.5%, 독일은 34.8%로 큰 차이를 보임
 - 스웨덴의 '90년 국민부담률은 52.2%에 달했으며, 일본은 '90년 29.0%로 낮음
 - 2007년 한국의 국민부담률(26.5%)을 1990년 OECD 평균(33.1%)과 비교하면 6.6%p차이로 격차가 많이 좁혀짐
-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29.7%로서, 1990년 영국의 32.6%, 1991년 독일의 39.5% 보다 낮아, 건전한 상태에 있음
 - 스웨덴은 1994년 72.4%에서 2007년 40.1%로 국가채무 비율을 대폭 낮췄으며, 이에 반해 일본은 1990년 68%에서 2007년 187%로 크게 악화되었음



자료: OECD

주: 1. 모두 GDP 비중. 2. 국가채무비중에서 독일은 1991년, 스웨덴은 1994년 수치
3. 정부지출 비중의 경우, 독일은 1991년, 스웨덴은 1993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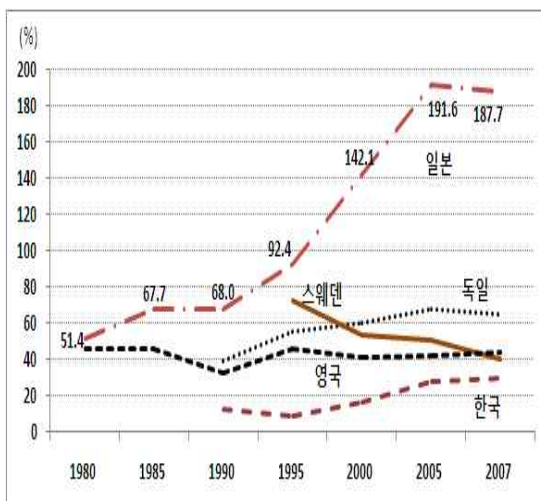
8) 국민부담률(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은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액을 GDP로 나눈 비중이며, 조세부담률은 사회보험을 제외하고 세금 수입의 총액만을 GDP로 나눈 비중

- 복지지출을 뒷받침하는 큰 정부나, 민간의 역할도 중요시하는 작은 정부 나를 가늠하는 정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2007년 우리나라의 경우 28.7%로서, 1990년 영국의 41.1%, 1991년 독일의 46.3%에 크게 못 미침
 - 스웨덴은 1993년 정부지출의 GDP 비중이 71.7%로서 대단히 '큰 정부'였으며, 일본은 1990년에 31.6%에 불과했으나 우리보다는 3%p 높았음

○(국가채무-재정수지 추이) 국가채무 비중과 재정수지 적자의 과거 경로 (path)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건전하지만, 국가채무가 최근 400조 원을 넘겼으며, GDP대비 비중도 1990년 13%에서 2007년 30%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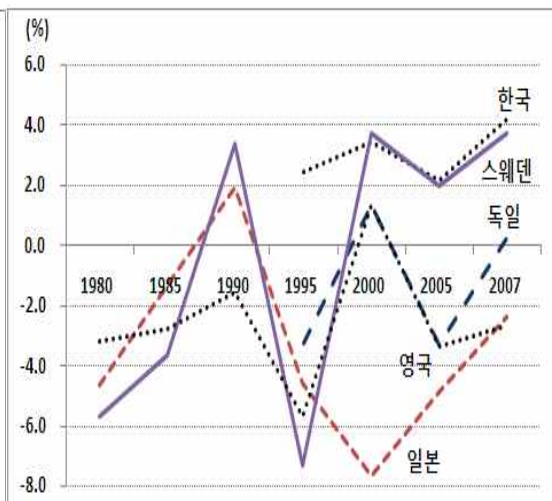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과거에 비해 국가채무 비중과 재정수지가 양호한 편이지만, 2010년 국가채무 규모가 400조 원을 넘기는 등 최근 증가 속도가 빨라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스웨덴은 '90년대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에 성공하여, 2000년대 이후 국가채무도 건전해지고 있으며, 재정수지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은 최근 20여년간 조세부담 없이 복지확대에 매달린 결과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극심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에 시달리고 있음
 - 영국과 독일의 국가채무는 큰 변동이 없으며, 독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영국이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음

<국가채무 비중 국가별 추이>



자료: IMF Economic Outlook (2010)
주: GDP 대비 비중

<재정수지 국가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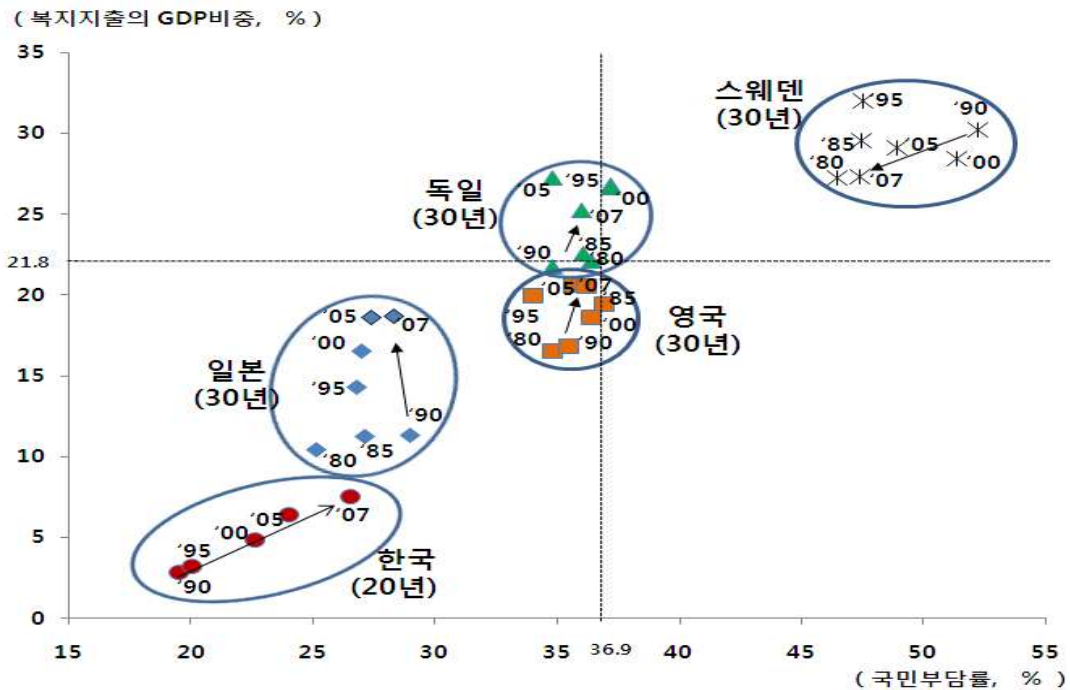
자료: IMF Economic Outlook (2010)
주: GDP 대비 비중

④ 복지지출 경로 비교(path analysis)

○(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 선진국의 1980년부터 2007년까지 복지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의 과거 경로(path)를 추적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低부담, 低복지 모형에 해당하며, 1990년 일본 수준에도 못 미침

-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지난 20여년간 2배 이상(2.8%→7.5%), 국민부담률은 7%p(19.5%→26.5%) 급증했으며, 향후 어떤 경로를 밟아서 선진국의 2만 달러 수준(복지지출 20%, 국민부담률 35%)에 도달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
- 일본은 1990년 이후 20여년간 국민부담의 증가 없이 복지지출 비중만 늘어난 결과, 최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후유증을 겪고 있음
- 스웨덴은 1990년에 고부담-고복지 모형이었으나, 이후 국민부담률과 복지지출 비중을 함께 줄여 2007년 현재 30여年前인 1980년 수준으로 복귀함
- 영국, 독일은 1980년대에 복지지출의 GDP 비중 20%, 국민부담률 35%에 도달했으며, 일본은 조세부담 없는 복지 확대로 재정 악화를 자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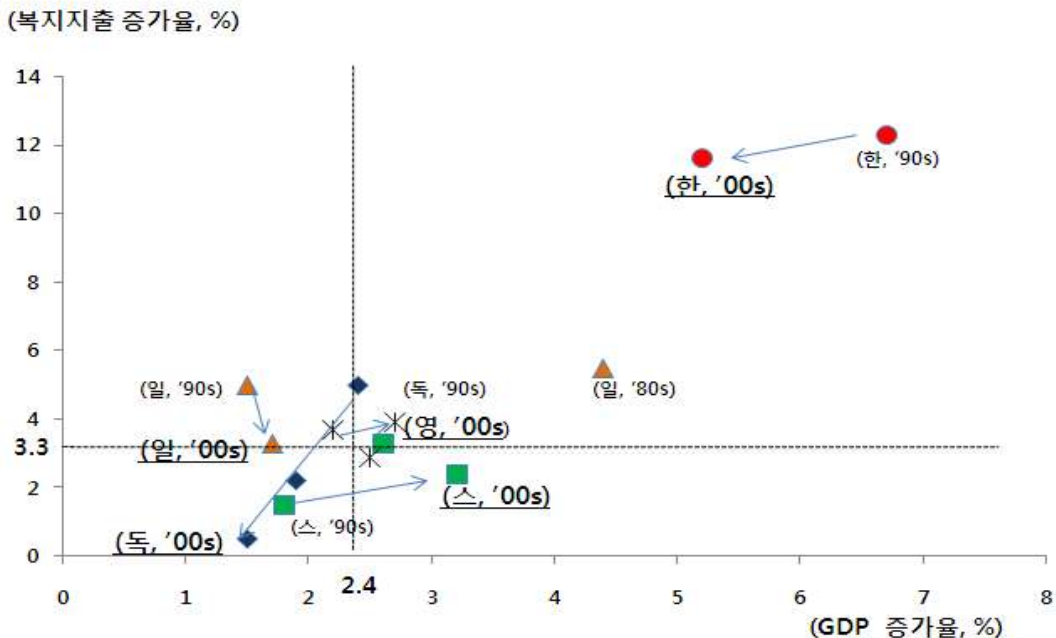
< 복지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의 과거 경로(path) >



자료: OECD 자료에 기초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1. 국가별로 1980, 85, 90, 95, 00, 05, 2007년의 이동궤적을 표시
 2. 한국은 1980, 85 복지지출 자료가 없어서 1990년부터 표시
 3. 국민부담률 36.9%, 복지지출 21.8%는 1980~2007년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의 단순 평균

- (복지지출과 경제성장률) 지난 30여년간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네 나라는 2.4%의 성장률 하에서 3.3%의 복지지출 증가를 보인데 반해,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6%의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12%의 복지지출 증가를 기록
-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약 30여년간 선진 4개국의 경제성장률과 복지지출 증가율 평균은 각각 2.4%, 3.3%였으며, 1990년부터 2007년까지 20여년간 평균은 각각 2.1%, 3.2%로 성장률과 복지지출 증가율이 각각 낮아짐
 - 우리나라는 1990~2007년까지 약20여년간 GDP 증가율과 복지지출 증가율 평균이 각각 6.0%, 12.0%로서 성장률보다 2배 높은 복지지출 증가를 기록
 - 스웨덴은 2000년대에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복지지출 증가율은 성장률보다 낮았으며, 영국은 30년간 두드러진 변화가 없었음
 - 독일은 2000년대에 성장률의 하락과 복지지출의 대폭 감축을 경험
 - 일본은 지난 20여년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복지지출 증가율은 큰 폭의 하락이 없어, 최근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짐

< 복지지출 증가율과 GDP 증가율의 과거 경로(pat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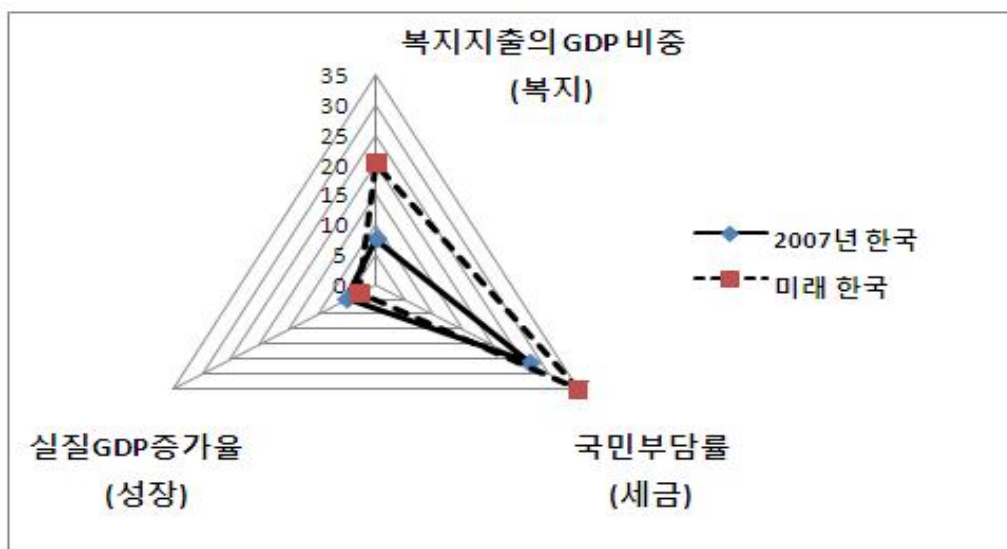


자료: IMF, OECD 자료에 기초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1. 한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의 '80년대, '90년대, '00년대(2000~2007년) 평균
 2. 한국은 1980년대 복지지출 자료가 없어서 '90년대와 '00년대만 표기
 3. GDP증가율 2.4%, 복지지출 증가율 3.3%는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단순평균

3. 시사점 및 정책 과제

- (복지-세금-성장의 연계모델 정립) 일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독일과 영국 수준을 따라가려면 복지지출의 GDP 비중, 국민부담률, 경제성장률(복지-세금-성장)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⁹⁾와 국민연금, 국가재정의 미래를 감안해 본다면, 향후 복지지출-조세부담-성장률 3가지 지표를 연계하여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을 높여가되 성장률 하락은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도달했던 2007년 당시 복지지출 비중 7.5%, 국민부담률 26.5%를 영국, 독일의 소득 2만 달러 당시(1990년경) 복지지출 비중 20%, 국민부담률 35% 수준으로 언제 어떻게 끌어올릴 지가 핵심
- 조세부담은 소폭 올리면서 복지지출 비중을 2배 이상 끌어올리려면 복지프로그램 내부의 구조조정, 정부지출 내부의 구조조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아울러 증세를 최소화하면서 세원을 확충하는 스마트한 정책적 노력 필요
- 복지지출프로그램의 신규 도입時에는 반드시 재원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 재정준칙의 강화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복지-세금-성장의 연계 모델 (시안) >



9) 현재 11%인 노인인구 비율이 2030년에 24%로 급등할 전망이며, OECD 선진국 평균과 비슷해짐(별첨 2)

○(성장친화적 복지프로그램 강화) OECD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보육과 직업훈련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성장친화적 복지프로그램이 취약하고 지출 비중도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이 부분의 집중 보완이 시급함

- 복지프로그램 내부에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예를 들면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보육분야 지출과 실업급여 보완과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지출 등 성장친화적 복지프로그램은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직접적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비중은 점차 줄어나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가운데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직업을 알선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된 지출의 GDP 비중은 2007년 0.1%로서 OECD 평균 0.5%에 크게 뒤지고 있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지출이 높고, 사회보장 지출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고 소득격차도 완화됨.

· 아동보육, 육아휴직, 부성휴가 등과 관련된 가족분야 지출은 2002년 GDP의 0.1%에서 2007년 GDP의 0.5%로 5년 만에 5배 급상승했으나, 2007년 OECD평균(2.0%)의 1/4, 1990년 OECD평균(1.6%)의 1/3에 불과

○(주거복지 강화) OECD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주거복지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지출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를 도입하고 전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등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LH공사의 조사¹⁰⁾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가구당 연간 107만원

· OECD 회원국 가운데 28개 나라에서 임대료 보조정책을 운영 중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의료비 지출과 재정적자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이 시급함

- 2010년 건강보험의 당기수지 적자¹¹⁾가 6조 원을 넘었고, 국고지원은 5조 원에 근접하며, 노인진료비 비중은 2006년 26%에서 2010년 32%로 증가했음

10) 2007년12월 LH공사(구 주택공사) 보고서

11)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국고지원을 감안한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2010년 1.2조, '20년 15.9조, '30년 47.7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지출 구조조정) 증세 없이 복지 지출을 늘리는 방안은 정부지출의 22%에 달하는 경제사업 비중을 줄여 복지분야 지출로 전환하는 것임

- 1996년 일본의 경제사업 비중이 15.9%, 1991년 독일의 경제사업 비중이 11.5%였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사업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시키고 그 여유 재원을 복지지출 증대에 활용할 수 있음
- 기존 도로의 직선화(直線化) 사업 등 불요불급한 SOC사업 예산의 비중을 줄이면서 점차 복지지출 예산으로 전환함
- 중장기적으로 남북 평화체제 구축에 따라 국방예산 비중도 낮아질 수 있음

○(세원투명성 제고) 국민부담률이 최근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증세보다는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을 제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는 1993년 GDP의 27%까지 증가했다가, 2007년 20%까지 하락했으며, 지하경제 규모를 더 줄임에 따라 세수의 추가 확보도 가능함
- 2000년대 지하경제 규모의 하락은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세제 혜택)¹²⁾에 따른 것¹³⁾이며, 선진국 수준(10%)까지 내려갈 여지는 충분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과약률이 51%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향후 ‘간이과세’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최소화하는 등 세정 혁신을 통해 근로소득자(75%)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경제연구본부 수석연구위원 김동열 (2072-6213, dykim@hri.co.kr)

12)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 등으로 2005년 기준 민간소비지출(215조)의 약 75%(161조)가 과세인프라(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포착되는 것으로 분석됨
 13) 박명호 외(2010.12)의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카드 사용액이 1% 증가할 때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이 0.11~0.13% 정도 감소하며, 2006년 17.7%까지 감소했던 지하경제 비중이 2009년 19.2%로 소폭 반등함

<별첨 1> 국가별 국민부담률, 정부지출 비중, 복지지출 비중 추이

(단위 : GDP 대비 %)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한 국	국민부담률	17.1	16.1	19.5	20.0	22.6	24.0	26.5
	정부지출 비중	-	-	19.5	20.4	22.4	26.6	28.7
	복지지출 비중	-	-	2.8	3.2	4.8	6.4	7.5
일 본	국민부담률	25.1	27.1	29.0	26.8	27.0	27.4	28.3
	정부지출 비중	-	-	31.6	36.0	39.1	38.4	35.9
	복지지출 비중	10.4	11.2	11.3	14.3	16.5	18.6	18.7
영 국	국민부담률	34.8	37.0	35.5	34.0	36.4	35.7	36.2
	정부지출 비중	-	-	41.1	43.9	39.1	44.1	44.0
	복지지출 비중	16.5	19.4	16.8	19.9	18.6	20.6	20.5
독 일	국민부담률	36.4	36.1	34.8	37.2	37.2	34.8	36.0
	정부지출 비중	-	-	46.3*	54.8	45.1	46.8	43.8
	복지지출 비중	22.1	22.5	21.7	26.8	26.6	27.2	25.2
스웨덴	국민부담률	46.5	47.4	52.2	47.5	51.4	48.9	47.4
	정부지출 비중	-	-	71.7*	65.0	55.1	53.9	51.0
	복지지출 비중	27.2	29.5	30.2	32.0	28.4	29.1	27.3
OECD 평균	국민부담률	30.9	32.5	33.1	34.4	35.5	35.2	35.4
	정부지출 비중	-	-	-	-	-	-	-
	복지지출 비중	15.6	17.3	17.6	19.5	18.9	19.8	19.3

자료: OECD

- 주: 1. 국민부담률(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은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액을 GDP로 나눔
- 2. 정부지출 비중의 경우, 독일은 1991년, 스웨덴은 1993년 수치부터 제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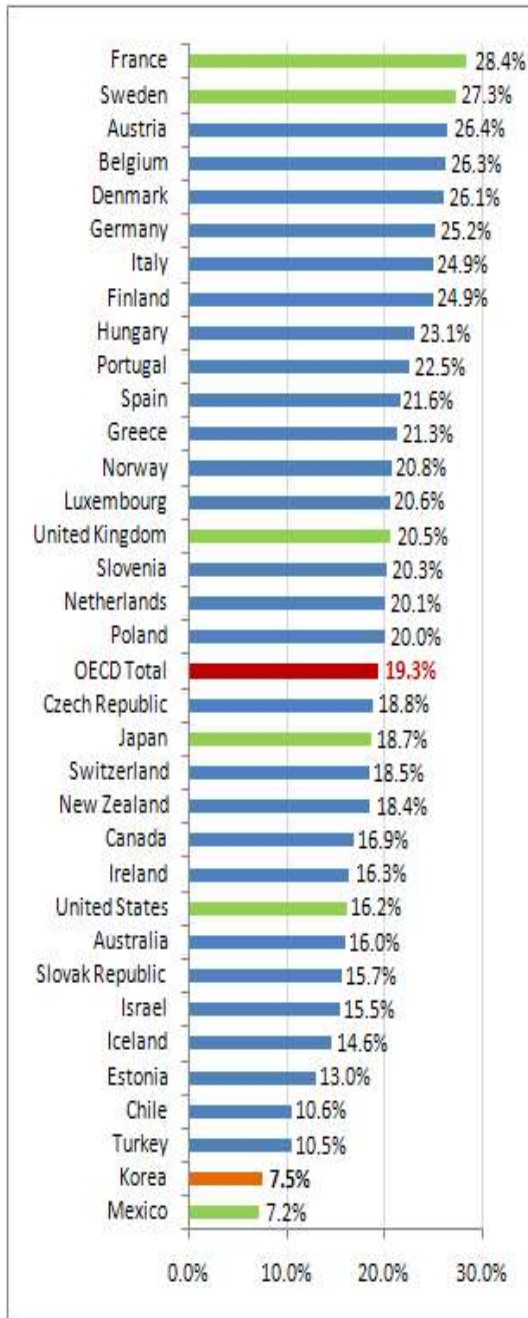
<별첨 2> 한국, 일본, OECD국가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2000년	2010년	2030년	2050년
한 국	7.2	11.0	24.3	38.2
일 본	17.4	23.1	31.8	39.6
OECD 평균	13.0	14.8	21.5	25.8

자료: 통계청,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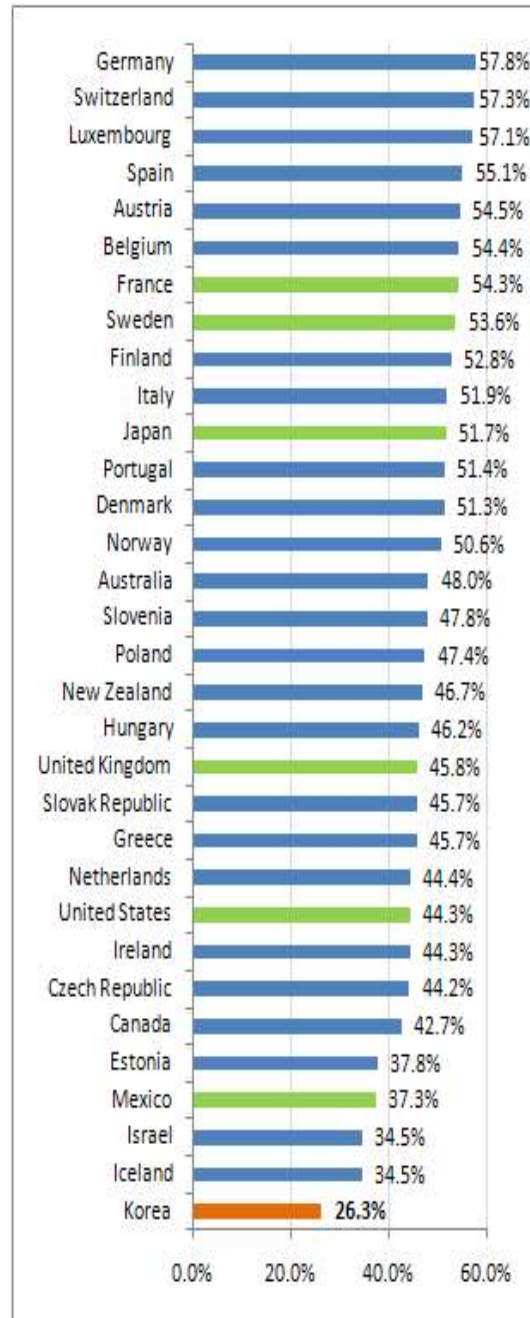
<별첨 3> 국가별 복지지출 비중 비교 (2007년 기준)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자료: OECD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자료: OECD

<별첨 4> OECD 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9개 분야 38개 프로그램)

분 야	지출 형태	프로그램 형태
① 노령 (Old age)	현금 지원	01. 노인 연금 Pension
		02. 노인 조기은퇴 연금 Early retirement pension
		03. 노인 기타 현금지원 Other cash benefits
	서비스 지원	04. 노인 거주 도움 Residential care / Home-help services
		05. 노인 기타 서비스 Other benefits in kind
② 유족 (Survivors)	현금 지원	06. 유족 연금 Pension
		07. 유족 기타 현금지원 Other cash benefits
	서비스 지원	08. 장례비용 Funeral expenses
		09. 유족 기타 서비스 Other benefits in kind
③ 장애 (Incapacity related; 장애, 산재, 질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	현금 지원	10. 장애연금 Disability pensions
		11. 산재연금 Pensions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12. 산재관련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occupational)
		13. 기타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other sickness)
	서비스 지원	14. 근로무능력 관련 기타 현금지원 Other cash benefits
		15. 근로무능력 재가 지원 Residential care / Home-help svcs.
		16. 사회복귀 지원 Rehabilitation services
17. 근로무능력 기타 서비스 Other benefits in kind		
④ 보건(Health)	서비스 지원	18. 의료서비스 지원 Health / Benefits in kind
⑤ 가족 (Family)	현금 지원	19. 가족 수당 Family allowances
		20. 출산·육아 유급휴가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21. 가족 기타 현금지원 Other cash benefits
	서비스 지원	22. 출산·육아지원 Day care / Home-help services
		23. 가족 기타 서비스 Other benefits in kind
⑥ 적극적 노동시장 (Active labour market)	통합 (현금+서비스)	24. 공공고용알선 및 관리 PES and Administration
		25. 직업훈련 Training
		26. 일자리 나누기 Job Rotation and Job Sharing
		27. 고용 인센티브 Employment Incentives
		28. 고용지원 및 재활 Supported Employment / Rehabilitation
		29. 직접 고용창출 Direct Job Creation
		30. 창업 인센티브 Start-Up Incentives
⑦ 실업 Unemployment	현금 지원	31. 실업수당/퇴직금 Unemployment compensation/ severance pay
		32. 구조조정 등의 조기퇴직 Early retirement program
⑧ 주거 (Housing)	서비스 지원	33. 주택보조 Housing assistance
		34. 주택 기타 서비스 Other benefits in kind
⑨ 기타 (Other social policy areas)	현금 지원	35. 소득 보전 Income maintenance
		36. 기타 현금지원 Other cash benefits
	서비스 지원	37. 사회적 지원 Social assistance
		38. 기타 서비스 Other benefits in kind

<별첨 5> 복지프로그램별 지출의 GDP 비중 국가별 비교 (2007년 기준, %)

	한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OECD
전 체	7.5	18.7	20.5	25.2	27.3	19.3
① 노령	1.6	8.8	5.8	8.7	9.0	6.4
② 유족	0.3	1.3	0.1	2.1	0.5	1.0
③ 장애	0.6	0.8	2.4	1.9	5.0	2.1
④ 보건	3.5	6.3	6.8	7.8	6.6	5.8
⑤ 가족	0.5	0.8	3.2	1.8	3.4	2.0
⑥ 적극적 노동시장	0.1	0.2	0.3	0.7	1.1	0.5
⑦ 실업	0.3	0.3	0.2	1.4	0.7	...
⑧ 주거	1.4	0.6	0.5	...
⑨ 기타	0.8	0.3	0.2	0.2	0.6	0.7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별첨 6> 복지프로그램별 지출의 정부지출 대비 비중 (2007년 기준, %)

	한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전 체	26.3	51.7	44.3	57.8	53.6
① 노령	5.6	24.3	12.9	19.9	17.6
② 유족	0.9	3.6	0.3	4.7	1.1
③ 장애	1.9	2.2	5.4	4.3	9.9
④ 보건	12.2	17.4	15.2	18.0	12.9
⑤ 가족	1.6	2.2	7.2	4.2	6.6
⑥ 적극적 노동시장	0.5	0.5	0.7	1.7	2.2
⑦ 실업	0.9	0.9	0.5	3.2	1.3
⑧ 주거	3.2	1.4	0.9
⑨ 기타	2.7	0.7	0.4	0.4	1.2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참고문헌 >

- 노대명 외(2008),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승준(2008), '분야별 재원배분의 결정요인 분석과 국제비교', 국회예산정책처, 2008.12
- 안상훈(2010), '한국형 복지전략, 맞춤형 생활보장으로 전환해야', 한국선진화포럼 제50차 월례토론회 발표자료, 한국선진화포럼, 2010.11
- 안종범(2010), '복지지출과 재원부담의 연계와 대국민합의', 한국선진화포럼 제50차 월례토론회 발표자료, 한국선진화포럼, 2010.11
- 안종범-김을식(2004), '복지지출수준의 국제비교', 재정논집 제19집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년9월
- 안종범-안상훈-전승훈(2010),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 유근춘 외(2008),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근춘 외(2009), 『2009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석명 외(2006), 『한국의 사회보장예산모형 개발 - ILO Social Budget 모형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영진 외(2007), 『복지재정과 시민참여』, 나남출판
- 전승훈(2006),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06.1
- 최성은-강지원(2010), 『2010 사회예산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세계잉여금 관련)
- 한국은행, 국민계정
- OECD, SOCX Database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3.0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	1.5
일본	-6.3	-19.9	11.3	-1.2	5.7	4.3	6.8	3.0	4.5	-	1.6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1	8.1	7.2	4.4	4.8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2월18일	2월24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3.59	3.46	-0.13%p
	엔/달러	92.93	88.43	81.19	83.31	82.43	-0.88¥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3607	1.3749	0.0142\$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2,391	12,069	-322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10,843	10,453	-39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94	3.81	-0.13%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12.1	1,131.2	19.1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2,013.1	1,949.9	-63.2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2월18일	2월24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86.18	96.43	10.25\$
	Dubai	78.06	73.14	88.80	98.96	110.77	11.81\$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41.78	345.85	4.0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